

여야, 예산안 처리 무산 '네 탓 공방'

“LPG 특소세 탕” vs “EITC 강행 탕”

<근로소득보전세제>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 법안이 부결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안에 대한 수정안을 기습 제출하는 바람에 '국회 사상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EITC 도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발생한 사태"라고 맞섰다.

열린우리당 노석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군복무로 인한 청년층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군복무 단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산법·파병연장안 등은 의결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돌연 부결됨에 따라 처리가 무산됐다.

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 유가보조금이 80%나 되는 상황에서 면세를 해줘야 별다른 혜택이 없고 오히려 가격구조만 왜곡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서에만 편승한 포퓰리즘적 처사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군복무 단축 놓고도 날선 설전

한나라당은 대선을 의식한 '꼼수 공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젊은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감축 반대 등의 직접대응은 자제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복무기간 단축은 전형적인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며 "청와대가 밀실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면 '제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국회내 관련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택시 LPG 특소세 면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택시 LPG특소세 면제 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여당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관련 예산은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냐"고 맞섰다.

군복무 단축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저녁 한남동 외교교통상부 장관 공관에서 송민순 외교교통상부 장관이 역대 외교 장관들과 초청만찬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빈, 최호중, 최광수, 이원경 전 장관, 송민순 장관, 박동진, 이상욱, 공로명, 홍순영, 한승수, 윤영관 전 장관. /연합뉴스

노대통령 '전작권 환수 반대' 비난 발언 관련

역대 국방장관, 해명 요구 방침

내일 긴급회동 추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반대했던 전직 국방장관 등을 비난한 것과 관련, 당사자들이 오는 26일 긴급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 장관 등이 의견을 조율중이며 아직 26일 회동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우회 회장단과 역대 국방장관 10여 명이 앞서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한민국제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회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는 이상훈, 김성은, 오자복, 이기백, 김동진, 김동진, 이종구 전 장관 등 10여 명의 역대 국방장관들이 참석했다.

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회동, 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반박하는 모습을 취할 경우 노 대통령의 '군대 발언'과 문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들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적극 '해명'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우회는 지난 22일 서울 잠실동 성우회 사무실에서 김상태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너무 소극하다", "밤잠을 설쳤다", "해명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관계자는 24일 "오는 26일께 역대 국방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회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역

한나라 무등산서 새해 해맞이

'대선승리' 각오 다질 듯

한나라당이 2007년 새해 아침을 광주 무등산에서 맞으며 대선 승리의 각오를 다진다.

한나라당 참정처운동본부는 내년 1월 1일 오전 무등산 정상에서 권영세, 유석춘 공동본부장을 비롯한 당

직자 및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해맞이 행사'를 개최기로 했다. 행사에는 특히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원희룡 의원 등 당내 대선주자들도 초청을 받아 이들이 모두 참석할 경우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행사 전날인 31일 버스

편으로 광주에 도착, 여장을 풀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숙소를 떠나 무등산 중머리재까지 오른 뒤 오전 7시 41분으로 예정된 일출을 지켜볼 예정이다. 해맞이 후에는 영호남 대학생 대표 등이 새해 한나라당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발표하고 등산객들과 떡국을 함께 먹는 행사도 갖는다. 이들은 이어 망월동 5.18 국립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다.

차기 6자회담 빨라야 내달말 개최

참가국 일정·BDA 실무회의 등 고려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12월 18~22일)가 가시적 성과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차기 6자회담은 참가국들의 일정상 빨라야 1월 마지막 주에나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13~15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는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과 일부 회담 수석대표들의 공식 일정 등 때문에 물리적으로 1월 20일 이전에는 회담이 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 賢一郎)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일부 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는 1월 넷째주(22~28일) 중 끝나는 해외출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간 사전조율이 급전전될 경우 1월 첫 주나 둘째주에 전격적으로 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각국별 보고 및 평가 시간이 필요하고 핵폐기 이행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1월 상순

개회 가능성은 낮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지난 회담에서 BDA(방코델타아시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만큼 참가국들은 1월22일(월) 시작하는 주에 개최될 전망이다. 북미간 후속 BDA회의가 끝난 뒤 협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회담 일정을 본격 협의할 가능성이 높아 차기 회담은 빨라야 29일 시작되는 1월 마지막 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18~22일 진행된 5차 2단계 6자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의장성명에 따르면 각국은 '가장 빠른 기회'(at the earliest opportunity)에 회담을 다시 열기로 했다.

참여정부 인재DB 11만8천여명 관리 광주 1,815명 포함

청와대가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계경(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인재DB 성별 수목현황 및 관리 항목' 자료에 따르면 11월30일 현재 국가인재DB에는 총 11만8천570명의 인물 정보가 수록·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은 10만6천명, 여성은 1만2천570명으로 성별 불균형이 심했다. 지역별(직장 주소 기준)로는 서울(3만3천617명), 경기(9천423명), 대전(4천173명), 부산(3천307명), 경북(2천102명), 대구(1천965명), 광주(1천815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고시학원 advertisement with text '공인종개사' and '1, 2'.

상가·사무실 임대 advertisement with text '상가·사무실 임대' and '1100, 1100, 600, 1031'.

FURSYS advertisement with text 'FURSYS 가 만든 의자는 다릅니다' and '퍼시스남광주전시장 (062) 225-5100'.

Advertisement for a construction or renovation company with text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